

도내 각 정당 조직 정비에 명암 뚜렷

더민주, 지역위원회별 정기대의원 대회... 새누리, 정운천 도당위원장 추대... 국민의당, 중앙당은 당헌당규 정비 중

도내 각 정당들의 움직임에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정당은 당세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는 아직도 갈망질하는 모습을 보여 정당별 조직 정비에 따라 향후 정치권의 명암이 뚜렷이 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26일 전주읍과 김제부안 지역위원장을 선출하면서 10곳에 대한 지역위원장을 모두 확정했다.

지역위원장은 종전 진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는 8월 13일 도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정기대의원 대회를 대비, 이달 28일부터 지역위원회별 정기대의원 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28일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진안문화의 집 △28일 익산시갑연리지컨벤션웨딩홀 △30일 남원시임실군순창군 남원농협 △30일 정읍시고창군 고창청소년수련관 △30일 전주시병 전주덕진노인회관 △8월1일 군산시 KBS방송 어린이극장 △8월2일 익산시를 △8월2일 전주시갑 등이다.

도당 관계자는 "새로 선출되는 도당 위원장과 함께 지역발전과 전북도민들의 민생을 챙기는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정운천 도당 위원장을 추대함으로써 새로운 동력 창출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것은 신한국당 이후 20년 만에 처음인바 이번 기회에 지역 대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지역현안 건의 송하진 도지사가 27일 세종청사를 방문해 기획재정부 박춘섭 예산실장 및 각 부처예산심의관을 만나 2017년 국가예산 확보 및 현안사업을 건의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여세를 몰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몰아가겠다는 심산이다. 무엇보다도 정운천 위원장은 타 정당 지역구 의원들보다 홀로서기 노력을 더욱 강화해 새누리당 외연을 확대한다는 각오다.

정운천 도당위원장은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전북을 위한 일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전북도민으로서 긍지를 높이고 당원 중심의 당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면에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여전히 주춤거리고 있다.

전북도당 모양새만 갖췄을뿐 앞날은 험난하기만 하다. 지난 4.13 총선을 치른지 석달여가 흘렀지만 지금까지 중앙당은 당헌당규 정비를 진행 중이다.

이에 전북도당 위원장 등 지도부 구성 등 지역도당 체제구축에도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지난 7월초 지역위원장 후보들에 대한 면접을 치렀을 뿐이다.

전북내 제1당으로 우뚝 섰지만 오히려 더불어민주당보다 존재감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중앙당 제개정위가 오는 9월까지 당헌당규 정비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결국 지역내 수권정당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자 했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가 관계자는 "조속히 조직체제가 구성되지 않으면 총선에서 지면 불씨가 언제 꺼져 버릴지 모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영향력이 갈수록 팽위를 펼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당 색깔이 한번 잃어지면 그 이미지는 불식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김관영 금융실명거래·비밀보장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김관영(국민의당, 군산) 의원은 지난 25일 과세당국이 관리하는 금융소득정보를 통계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관영 의원은 "소득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에는 가계소득 및 지니계수와 같은 기초통계의 정확성이 필수적이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국가 통계 정확성 제고의 시급성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가계소득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선 이들 정보가 통계청에 제공되어야 하지만 국제성이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관련 정보를 거부해 왔다. /신광영 기자

이종걸, 더민주 당대표 출마의사 밝혀

이종걸 의원이 27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추미애·송영길·김상곤 3자 구도에서 4자 구도로 바뀌게 됐다. 다만 이 의원의 출마 방침에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반대하고 나서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운재선입니다' 인터뷰에서 "나는 대선 후보와 최적의 리닝메이트(관계)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아주 공정하고 아주 개방적인 관리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과정에서는 내가 판을 만들어내는 아권의 전체 연대의 책임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출마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이들 4명은 다음달 5일 당 중앙위에서 예비경선을 치르게 됐다. /뉴시스

'사드배치 국무회의 심의 거처야'

국회 입법조사처, 이용호 의원 질의에 회답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이하 사드) 배치의 국무회의 심의 대상 여부'를 질의한 결과, 사드 배치는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조사처에서 "대부분의 헌법 학자들이 사드 배치는 헌법 제89조 제6호의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해당하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에게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에는 거의 제한이 없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사드 배치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 사항'이라 생각하고 이를 의안으로 제출하면 국무회의의 심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호 의원은 "헌법에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국가 중요 사안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이라면서 "NSC에서 합의해 대통령 승인으로 사드배치를 졸속 결정했다는 것은 정부가 위헌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필요적 심의기관"이라면서 "정부라고 해서 위헌이 정당해질 수는 없는 만큼 사드배치는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사드 사태' 장기화... 박대통령, 전면에 나설까?

성주 군민들과 직접 못찾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군의 민심이 좀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성주 배치 결정이 발표된 이후 보름 정도 지났지만, 국방부와 성주 주민들 간 대화 채널은 여전히 열리지 않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그 사이 성주 주민들은 보름 가까이 촛불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1차례 상경투쟁 등으로 사드 배치 결정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 등은 지난 15일 사태 해결을 위해 성주를 찾았다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7시간 가까이 발이 묶였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지난 26일 성주를 방문했지만 주민들은 상복 차림으로 이들을 맞이하며 장례 퍼포먼스까지 벌였다.

이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성주 군민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실제 박 대통령이 이번 주 여름휴가를 보내면서 사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7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성주 민심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은 정부와 여당의 소통

노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지금 당장 전면으로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라도 주민들과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 원내대표는 전날 성주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성주 군민들의 심경이 어떤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무리 국가 안보가 중요해도 일방적으로 강행은 안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민심 악화를 자초했다는 의견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황 총리가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황 총리가 나서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성주 주민들 상당수도 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성주 사드배치 저지 투쟁위원회 측은 "사드 배치 결정 재검토를 발표하지 않는 한 대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과의 만남은 사태 해결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만큼 성주 주민들이 국방부나 정부 당국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뉴시스